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홍국 박성중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066
천안한하빌 PSD, 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조현희: 723-5303)
제 목 판사들의 수뢰사실 보도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서
날 짜 1998. 2. 11. (총 2 쪽)

성명서

판사들의 수뢰사실 보도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서

1998년 2월 11일 참여연대

일부 판사들이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충격적인 사실이 마침내 드러났다. 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공공연하게 나돌던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사법비리의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데 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사건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맡은 혐의로 지난 2월 9일 구속된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그동안 고위 법관의 수뢰설이 허다하게 제기되었고 그 때마다 의혹으로만 남은 채 그친 바 있고, 심지어 김현철과 관련한 공판정에서는 검사가 재판과 관련한 금품수수의 법조현실에 대해 경고까지 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이순호 변호사사건의 경우는 수표추적을 통한 계좌 확인까지 드러나 피할 수 없이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이제 사법비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척결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법조비리의 근절을 위한 법조계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의와 양심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조계가 부도덕한 돈과 기득권이 난무하는 또 하나의 비리현장으로 전락한다면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사법부가 더 이상 부정과 부패의 온상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수뢰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여 그들의 비리사실을 숨김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돈을 받은 판사들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엄정히 따져 법적·윤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셋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전관예우'나 사건 청탁을 둘러싼 사법병폐의 의심이 있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

넷째, 대법원은 법원 내부의 치부를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함은 물론, 앞날을 향한 대혁신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지금까지 관행화 되어온 변호사와 법원 간의 유착관계 역시 이번 기회에 척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2월 11일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